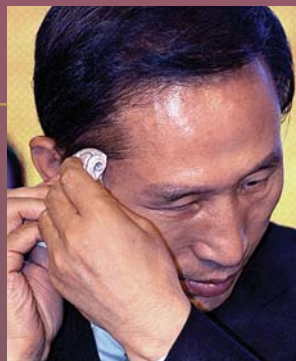




비자금 조성과 떡값 살포 이건희

BBK 등 비리 재판기 이명박



차떼기 비리 원조 이회창

불법 대선자금 노무현



모두 범조자다



삼성‘떡값’공화국과
공범들

12면

노회찬 의원 인터뷰

—“반전평화 운동을 강화합시다”

3면



2007 대선과 민주노동당

—반한나라당 전선론,
후보단일화론 비판

4~5면

수능과 입시경쟁

—“우리는 입시 기계가 아니다”

—입시경쟁과

대학서열체제의 본질

9면

특집: 러시아 혁명 90주년 II

6~7면

국제

—무사라프를 옥죄는

계엄 반대 운동

—프랑스 노동자들의

반(反)사르코지 2차 파업

8면

‘우파 내전’과 ‘도로 민주당’

5면

www.counterfire.or.kr

<맞불> 웹사이트를 방문하세요

<맞불> 온라인 기사

고유가의 책임과 대안

노무현 정부는 석유 기업들의 폭리는 놔
둔 채 노동자 서민에게 고유가의 고통을
전가해 왔다.

독재자 무사라프에 맞서 싸우는 파키스탄 민중

파키스탄의 독재자 무사라프가 계엄령
을 선포한 진정한 배경과 계엄령에 맞선
투쟁의 의미를 살펴본다.

..... 새로운 기사들이
수시로 업데이트됩니다

지면 관계로 이번 호
존 물리뉴 칼럼은 없습니다



자이툰 파병 연장반대를 위한 반전 집회

일시 : 11월 18일(일) 오후 3시

장소 : 서울 명동

주최 : 파병반대국민행동 / 문의 : 02)795-4337

“인용해도 될까요?”

“그들[미국]은 일부 극단주의자들에게 넘어갈 가능성이 있는 더 민주적인 파키스탄보다는, 비록 일부 문제가 있지만 안정된 파키스탄을 더 좋아할 것”

— 파키스탄 정보장관 타리크 아짐 칸

“우리는 미국이 우리[대흥단호] 선원들에게 방조를 제공하여준 데 대해 고맙게 여기고 있고 ... 우리는 앞으로도 테러를 반대하는 투쟁에서 국제적 협력을 계속해 나갈 것”

— 대테러 전쟁 협력을 다짐하는 북한 <조선중앙통신>

“이건희 회장이나 이재용 전무가 삼성의 현지 공장을 방문하면 북한 김일성, 김정일이 현장지도 할 때와 거의 유사한 분위기가 연출된다. 거의 종교적인 분위기다.”

— 김용철 변호사

<매일경제>: “때론 사회의 흠집처럼 보이더라도 불완전한 인간이 모여 사는 곳엔 ‘합리적 무시’가 필요하다.”

— 이견희에게 알아서 가는 언론

“[삼성 비자금] 그다지 어마어마한 범죄가 아니라고 본다.”

— 대한변협 사무총장 김현

“나는 거대 정당과 나에게 인격 살인을 가하는 언론 권력이라는 공통 앞에 선 외로운 전사”

— 이회창

“민주노동당에 대해 ‘범여권’이라는 수식어를 붙이는 것은 단순 표기 오류가 아니라 허위 사실 유포에 해당하고 심대한 명예훼손에 해당한다.”

— 권영길 후보 선대위 박용진 대변인

차별을 조장하는 차별금지법

정을
성소수자 차별저지 긴급행동,
동성애자인권연대 활동가

2007년 10월 2일 법무부는 ‘차별금지법 제정안’을 입법 예고했다. 이 법은 성별, 장애, 병력, 가족형태·가족상황, 성적지향 등 20여 개 영역을 차별 금지 대상에 포함시킨, 평등을 위해 진일보한 법이었다.

노무현 정부의 대선 공약이기도 했던 이 법은 국가인권위원회가 초안을 작성하고 인권운동 단체들과 전문가들의 의견을 수렴해 만들어졌다.

그러나 국가인권위원회가 차별 피해자를 보호하기 위해 권고한 장치들 — 징벌적 손해배상제, 이행강제금 등 — 이 삭제됐다. 이때만 해도 차별금지법은 반쪽짜리 정도는 됐다.

그런데 더 나아가 각계 의견서를 받는 과정에서 결국 우려했던 상황이 벌어지고 말았다. 노무현 정부는 일부 기독교단체들의 동성애 혐오와 재계의 경제제일주의에 놀아나 차별금지 대상에서 ‘성적지향’을 비롯해 ‘학력, 가족형태·가족상황, 병력, 출신국가, 언어, 범죄·보호처분 전력’ 등 7개 영역을 도려낸 채 정부안을 확정하려 한다.

일부 보수 기독교단체들은 차별금지법을 ‘동성애 찬성법’인 양 호도하며 성적지향 항목을 삭제하라고 요구해 왔다. 이들은 과천정부청사 앞에서 동성애 반대 기자회견을 개최해, “동성애가 확산돼 인구가 감소할 것이다”, “며느리가 남자라니 말이 안 된다”는 근거없는 주장을 늘어놓았다.

재계 역시 뒤로는 수십억 원의 땀값과 비자금을 조성하면서 차별금지법이 통과되면 기업이 망하고 경제가 어려워진다고 협박해 왔다.

차별 금지 대상에서 7개 영역이 삭제된 순간, 이제 차별금지법(안)은 실질적 구제조처도, 차별에 대한 인식 전환도 기대할 수 없는 무용지



‘긴급행동’은 11월 8일 기자회견을 열어, 차별 금지 대상에서 삭제된 7개 영역 복원을 촉구했다

물로 전락해 버렸다. 이 차별금지법으로는 차별을 금지하지도, 예방하지도 못한다.

동성애자와 성전환자들이 기업주들의 편견에 의해 해고당해도 전혀 보호받을 수 없게 될 것이다. 미등록 이주노동자들이 작업장 내 폭언과 폭행·고의적 임금체불 등 상습적인 인권유린을 당해도 최소한의 보호조처조차 기대할 수 없게 될 것이다. B형 간염 바이러스 보균처럼 업무에 지장을 주지 않는 병력을 가지고 있는 노동자가 해고 당해도 전혀 보호받을 수 없을 것이다.

인권선진국

노무현 정부는 서민 경제를 파탄 내는 것도 모자라 차별받는 약자들의 요구를 무참히 짓밟았다. 인권선진국으로 나아가고 있다는 자신의 말이 얼마나 위선인지 스스로 증명해 보인 셈이다.

지난 10월 31일, 성소수자 커뮤니티는 호모포비아(동성애혐오) 저지 대응책 마련을 위해 긴급 모임을 가졌다. 11월 5일에는 1백50여 명이 모여 ‘차별금지법 대응 및 성소수자 차별, 혐오 저지를 위한 긴급행동’(이하 긴급행동)을

발족했다.

그 뒤 21개 단체가 7개 차별영역 삭제에 항의해 긴급연대성명을 발표했다. 86개 단체와 1천2백58명의 개인 서명도 이어졌다. 휴먼라이츠워치 등 국제단체들의 연대도 모이고 있다.

11월 11일 범국민행동의날에는 긴급행동 주최로 사전집회도 열렸다. 커밍아웃에 대한 부담이 큰데도 외부에서 열린 첫 집회에 80명이 넘는 성소수자와 지지자들이 참가했다. 범국민대회에도 참가해 명동과 종로 한복판에서 무지개 깃발을 들고 구호를 외치며 행진하면서, 차별금지법이 억압받는 사람들 모두의 문제임을 알렸다.

동성애 혐오증과 노무현 정부의 차별금지법 통과를 저지하기 위해 성소수자들의 투쟁은 이제 한 걸음을 내딛었다. 성소수자들의 투쟁에 지지와 연대가 중요한 시점이다.

11월 22일 오후 6시에 보수기독교단체 대표체 격인 한국기독교총연합회 앞에서, 긴급행동과 진보적 기독교단체인 한기연(한국기독교청년학생연합회)이 공동 주최하는 항의 예배가 열릴 예정이다. 이 항의 예배에 많은 지지와 연대를 기대한다.

조민호를 당장 석방하라

경찰은 지난 11월 7일 민주노동당 광진지역위 대의원이자 ‘다함께’ 회원인 조민호 동지를 긴급 체포해 구속했다.

조민호 동지는 지난 8월 16일 이랜드 매출 타격 집회에서 경찰에 연행됐다 풀려난 바 있다. 당시에 조민호 동지는 단호한 묵비(진술 거부) 투쟁으로 저들의 부당한 수사에 협조하지 않았다.

조민호 동지에게 보복성 재소환장

을 보낸 경찰은 조민호 동지의 자취집에 찾아와 사찰도 서슴지 않았다.

그러나 조민호 동지는 “뉴코아·이랜드 투쟁이 끝날 때까지는 관련된 소환에 응하지 않는다”는 민주노동당의 올바른 방침을 따라 출두를 거부해 왔다.

그러자 경찰은 조민호 동지가 일하는 한국방송통신대 앞에서 사흘이나 잠복해 있다 조민호 동지를 덮쳐 끌고 갔다.



조민호 동지는 비정규직 악법에 분노해 민주노동당에 가입했고, 급진적 대안을 찾아 ‘다함께’에도 가입했다. 그는 커서비스 등으로 학비

와 생활비를 마련하면서도 활동과 투쟁에 헌신해 온 투사이다.

조민호 동지는 이번에도 부당한 체포에 항의해 개인적 불이익도 감수한 채 묵비하며 운동을 방어하고 있다. 경찰은 “사회주의 조직원이라서 묵비한다”, “묵비하면 10년형을 받을 것”이라며 횡당한 협박을 하고 있다.

이랜드일반노조는 “헌신적인 연대를 보여 준 조민호 동지에게 감사의 인사를 표하며, 조민호 당원을 당장 석방할 것을 촉구”했다.

조승희

한국타이어 – 죽음의 행진을 멈춰라

송의용(한국타이어 노동자)

한국타이어 대전·충남 금산 공장에서 지난 1년 반 동안 15명의 노동자들이 심근경색, 폐암, 식도암, 간세포암, 뇌수막종양 등으로 사망했다.

산업안전보건연구원 직업병연구센터는 이들이 유기용제(솔벤트) 중독에 의한 산재로 사망했을 가능성이 높다고 말한다.

급격한 노동강도 강화도 죽음의 한 원인이었다. IMF 이후 사측은 4조3교대로 근무형태 전환과 인력 축소, 비정규직 전환을 강행했다. 휴식시간, 식사시간, 심지어 화장실 가는 시간까지 통제하면서 목표 달성에 열을 올렸다. 문국현은 어처구니없게도 이런 한국타이어를 ‘유한김벌리 모델 도입의 성공 사례’라고 말해 왔다.

노동자들이 죽어가는 동안 한국타이어

의 영업이익은 지난 1년 동안에만 무려 90퍼센트나 증가했다. 이명박의 사위인 한국타이어 부사장 조현범은 이명박 부인에게 1천2백만 원 짜리 핸드백을 선물했다.

한국타이어 사측은 업무 제휴한 병원과 공모해 산재 의혹들을 은폐하고, ‘가게도’까지 그려서 유가족들을 회유·협박해 왔다. 사망 원인을 규명하지는 현장 노동자들은 ‘회사의 명예를 훼손했다’며

징계했다.

민주노동당 대전시당과 유가족대책위는 지난 8월부터 공장 앞에서 항의 시위를 하고 있다. 그러나 노동부는 사측의 눈치를 보며 미적거리고 있고, 한국노총 소속인 한국타이어 노조 지도부는 오히려 민주노동당 대전시당에 ‘항의’했다.

앞으로 얼마나 더 많은 노동자들이 죽어갈지 두렵다. 진상을 철저히 규명하고 재발방지 대책을 수립해야 한다. 노동자 학살에 책임있는 자들은 모두 처벌받아야 하고 한국타이어 노조도 민주화돼야 한다.



노회찬 민주노동당 선거대책위원장 인터뷰

“파병 연장 저지, 출발점은 국회가 아니라 대중 속에 있다”

노무현 정부는 한반도 평화를 위해 미국과 공조한다며 파병 연장을 정당화하고 있습니다. 한나라당 후보 이명박도 자이툰이 “기름 밭” 위에 있다면서 노골적으로 경제적 이익을 강조하고 있는데요.

그것은 황당한 주장입니다. 그 얘기는 파병 자체는 실익이 없지만 미국을 도움으로써 반사이익을 얻겠다는 것인데, 실제로 파병 이후에 미국과 한반도의 관계가 어떻게 됐습니까? 훨씬 더 악화됐습니다. 2005년 6자회담을 미국이 파기한 것도 한 예입니다. 파병했는데 오히려 북미 관계가 더 악화됐습니다.

최근 북미 관계가 개선됐는데 북한 핵 실험 후의 정세 변화와 미국 국내 정세의 변화 때문에 미국의 태도가 변한 것이지 이라크 파병 때문이 아니란 것은 이미 입증된 사실입니다.

또, 석유 문제는 발상 자체가 지극히 제국주의적입니다. 석유 때문에 무고한 이라크 양민들을 학살해도 좋다는 주장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잘못된 입장입니다.

오히려 이라크 전쟁 때문에 최근에 유가가 사상 최고를 기록하고 있습니다. 미국이 이라크 전쟁을 일으켰기 때문에 우리가 앓아서 손해를 보고 있습니다. 무슨 병주고 약주는 것도 아니고, 이것만 보더라도 석유를 운운할 수 없다고 생각합니다.

통합신당 후보 정동영은 파병 연장 반대 입장을 발표했습니다. 과연 그의 말을 믿을 수 있을까요?

2003년에 제16대 국회에서 정동영 후보는 16대 국회가 해야 할 가장 중요한 일이 파병 결의를 채택하는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그리고 파병을 연장한 노무현 정부에서 장관을 지냈습니다. 이제 와서 대통령 선거를 앞두고 인심을 얻으려 파병 연장에 반대한다고 하고 있을 뿐이지 그는 근본적으로 이라크 전쟁 찬성론자입니다. 진실성이 없다고 봅니다.

물론, 우리는 이라크 파병을 반대하는 입장에서 과거가 어떻든 모든 파병 반대 세력들을 폭넓게 규합하겠지만, [그의 입장 변화는] 최소한 정치인으로서 책임있는 자세는 아닙니다.

민주노동당만이 파병에 반대했고 파병 연장안도 계속 반대해 왔기 때문에 유일한 평화 정당이라고 생각합니다.



국회에서 파병연장안을 부결시키려면 반전평화 운동을 더 확대 강화해야 한다

민주노동당 의원단은 연말 국회에서 파병연장안을 부결시키기 위해 어떤 활동을 준비하고 있습니까?

민주노동당은 이번 파병연장안을 반드시 부결시키기 위해서 뜻을 함께하는 의

원들, 파병 연장에 반대하는 의원들을 폭넓게 규합하고 있습니다. 지금 이미 1백명에 가까운 의원들이 규합됐고요, 1백명을 넘어설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민주노동당은 두 가지 방향에서 노력할 것입니다. 하나는 당적을 불문하고 개

별 의원들을 폭넓게 규합하는 것이고요, 또 하나는 정동영 후보가 일단 대선 국면에서 국민들에게 약속을 한 만큼 통합신당이 파병 연장 반대를 당론으로 결정하도록 압박해서, 과반수가 넘는 의석을 확보해 반드시 이번에 [파병연장안을] 저지하려 하고 있습니다.

반전평화 운동은 파병연장안을 부결시키기 위해 어떤 활동을 해야 한다고 생각하십니까?

제가 국회에 들어와 있긴 하지만, 정치판만 믿어서는 안 된다고 생각합니다. 반전평화 운동이야말로 진정한 대중운동으로 확대·강화돼야 합니다. 지금 대선이고 내년에 총선이 있지 않습니까? 정치인들이 선거를 의식한다 그러는데, 그것도 국민들이 광범하게 파병 반대를 외칠 때 의식하는 것이지, 국민들이 파병 문제에 관심이 없다면 정치인들도 파병 반대에 합류하지 않을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모든 것을 국회 안에서 해결해야 한다고 생각해서는 안 됩니다. 오히려 진정한 문제 해결의 출발점은 국민들 속에, 대중 속에 있다고 생각합니다. 지금까지 ‘다함께’를 비롯해서 반전평화 운동을 위해 열심히 노력해 온 세력들이 있습니다. 이 세력들이 대오를 흐트리지 말고 마지막 순간까지 우리 국민들 속에서 반전평화의 열기를 드높이는 데 앞장서 주시기 바랍니다.

인터뷰 · 정리 김용욱

한미안보협의회 한미 양국이 ‘테러와의 전쟁’ 협력을 다짐하다

얼마 전 제39차 한미안보협의회에서 양국 국방장관은 한미동맹 강화를 다짐했다. 그것은 끔찍한 전쟁 동맹의 강화일 뿐이다.

우선, 양국은 이라크 점령 협력을 합의했다. “범세계적 테러와의 전쟁에서 한미 양국 간 긴밀한 협력이 한미동맹을 지속적으로 강화시킬 것임에 의견 일치”(공동성명 2항)를 봤다.

한미 양국은 동북아에서도 “확고한 연합방위태세”를 갖추기로 합의했다. “주한미군의 주둔 및 한미동맹이 한반

도 및 역내 평화와 안정에 지속적으로 기여해 나갈 것[이다]”(2항, 5항) 동북아에서 벌어질지도 모를 전쟁 위험(예컨대 양안문제)에 한국이 휘말릴 수 있음을 다시 한 번 보여 준 것이다.

또, 한미 양국은 “연합방위태세[를] 유지”하고 “한미연합군사력 최상의 준비태세를 유지·강화”함으로써, 전시작전통제권 환수에도 불구하고 미군의 막강한 영향력을 유지하는 장치를 마련했다. 위선이게도, 한미 양국은 “북한의 조속하고 완전한 비핵화”를 언급한 반면

남한에는 “미국의 핵우산 제공”을 지속하기로 했다.

이 합의들은 노무현 정부가 미국의 오랜 바람을 다 들어줬다는 것과 한미동맹이야말로 세계와 동북아시아 모두에서 평화를 위협하는 세력임을 재확인했다. 노무현이 미국에 대해 “지나치게 자주적으로 나간 면”이 있다는 문국현의 주장은 한심하기 짝이 없다.

평화를 원한다면 한미 전쟁동맹을 즉각 해체해야 한다.

김하영

반한나라당 단일화는 말도 꺼내지 마라

김인식

종종 낡은 주장들이 새로운 형식으로 부활하곤 한다. 대선을 앞두고 부쩍 기승을 부리고 있는 이른바 ‘비판적 지지론’이 그 렇다.

대통합민주신당 대표비서실장을 지냈던 정대화 교수는 “정동영, 권영길, 문국현... 연합정부로 가라”(《오마이뉴스》 10월 26일치)고 주장했다.

이수호 새진보연대 대표, 함세웅 천주교정의구현사제단 상임대표, 이장희 평화통일시민연대 상임대표, 정해구 교수 등으로 구성된 ‘나라의 희망과 미래를 준비하는 시민사회단체협의회’도 범여권 후보 단일화를 촉구했다.

10월 31일에는 주한미군철수운동본부가 “반한나라당 3자 연대로 연립정부 구성하자!”라는 성명을 발표했다.

삼성 비자금 폭로와 이회창 대선 출마 선언 직후인 11월 6일에는 남북공동선언 실천연대(실천연대)가 ‘긴급진단 이회창 출마, 어떻게 볼 것인가’라는 글에서 반부패·반보수대연합을 주장했다.

물론 냉전 우파 정당인 한나라당의 재집권을 막고 싶은 심정은 이해가 된다.

그러나 한나라당이 집권할 수 있도록 길을 닦아 준 것은 노무현 정부와 범여권이다. 범여권은 민주 개혁 요구를 배신하고 한나라당과 다를 바 없는 정책을 폈다. “개혁세력의 집권을 옹호할 어떤 미약한 흐름도 존재하지 않는 침묵의 대선국면”(정대화)을 조성한 것은 다름아닌 노무현 정부와 범여권 자신이었다.

사실, 정동영과 문국현, 권영길 사이에 모종의 공통점이 있다고 보는 것은 완전한 착각이다. 최근에 정동영이 ‘왼쪽 깜빡이 등’을 켜고 있지만, 이것은 알팍한 술책일 뿐이다. 지금 정동영은 지키지도 못할 약속을 남발하고 있는 것이다. 노무현 정부와 열린우리당이 지난 5년 동안 그래 왔듯이 말이다.

문국현도 국민들의 건강보다 ‘미국 쇠고기 업체에 대한 차별’을 더 못마땅해 하고 “전투병만 아니라면” 파병을 지지할 수 있다고 말한다. 비정규직 투쟁에 대해서는 침묵으로 일관해 왔고 민주노동당한테 “기업에 대한 배려”가 없다고 비판했다.

인민전선

무엇보다, 대통합민주신당과 창조한국당, 민주노동당은 계급 기반이 완전히 다른 당들이다.

대통합민주신당은 기업주들의 자금·자원으로 운영되는 정당이다. 그래서 대통합민주신당(과 정동영)은 근본에서 사장들의 이익을 거스를 수 없다. 대통합민주신당의 목표와 우선순위는 노동자들의 이익과 충돌할 수밖에 없다. 그동안 노무현 정부와 대통합민주신당이 비정규직을 대량 양산하는 법안을 만들고 파병을 추진한 것은 이 때문이다.

문국현의 창조한국당도 노동자 정당이 아니다. 문국현은 “변호사, 판사, 검사, 의

사 등 전문직 종사자와 학자, 기업인들을 대거 진출시켜 대선과 총선에서 승리하겠다”고 말한 바 있다. 창조한국당이 중소자본가와 중간계급 지식인의 당이라는 점을 밝힌 것이다.

또, 문국현의 ‘가치’와 민주노동당의 ‘가치’도 다르다. 문국현에게 노동자와 피억압자는 은전을 빼놓아야 하는 대상일 뿐이다. 그는 노동자와 피억압자의 운동에 대해 아무 말 않는다. 반면, 민주노동당은 노동자와 피억압자의 운동을 적극 지지한다.

한편, 정대화 교수는 연합정부를 “새로운 상상력”이라고 했다. 그러나 진보진영과 부르주아 자유주의 세력이 연합해 수구보수에 대항하자는 연합정부는 역사적으로 실패한 인민전선의 재판일 뿐이다.

애초 ‘인민전선’은 파시즘에 맞서 부르주아 정치 세력까지 포함하는 광범한 국민연합(계급 연합) 구축을 뜻했다. 우리 나라에서는 좌파와 노동자들이 수구보수 세력인 한나라당에 맞서 중도우파 정당인 대통합민주신당을 지지해야 한다는 주장으로 나타난다.

그러나 1930년대에 ‘인민전선’은 모두 재앙으로 끝났다. ‘인민전선’을 구성하는 세력들 간에 근본적 이해관계가 충돌



범국민행동의날에 참가한 권영길 후보

했다. 예컨대, 스페인의 자유주의 부르주아지는 일관되게 토지·재산·교회·군대를 옹호했다. 그들은 파시스트 프랑코에 대항하는 전투에서 이 제도들을 옹호했다. 결국 ‘인민전선’ 정부는 농민의 투쟁 열망을 불러일으킬 수 없었다. 토지 소유에 강력한 이해관계를 갖고 있는 대부르주아지가 반파시스트 연립 정부에 포함돼 있었기 때문이다. 까팔루냐 노동자들이 파업을 벌였을 때도, ‘인민전선’ 정부는 부르주아 자유주의자들과 함께 노동자들의 사유재산 침범을 비난했다.

흔히 ‘인민전선’ 옹호론자들은 좌파가 부르주아지를 견인할 수 있다고 착각한다. 그러나 이런 주장은 전술이 아니라 자기 기만일 뿐이다. ‘인민전선’의 결정적 오류는 좌파가 자신의 정치 활동을 자본주의 정당의 통제에 종속시키는 것이(었)다. 그리하여 공동행동을 통해 노동자들을 단결시키는 운동을 건설할 수 없게 만든 것이(었)다.

반격

반한나라당 ‘인민전선’론을 펴는 사람들의 기저에는 수구보수의 정권 탈환에 대한 두려움이 깔려 있다. 이명박과 이회창이 지지율 1, 2위를 달리고 있는 것은 사실이지만 그와 상반되는 그림도 있다.

노무현 정부의 신자유주의 공세 중 하나인 비정규직 확산은 커다란 저항에 부딪치고 있다. 한미FTA도 대중적 반대 여론에 직면해 주류 정당의 후보들은 한미FTA를 쟁점화하고 싶어하지 않는다. 반전 여론도 여전하다.

요컨대, 노무현 정부의 위기는 사회 상층부의 ‘수구화’ 경향 재촉과 아래로부터의 혼란스러운 급진화를 낳고 있다. 이렇게 정치적 양극화가 첨예하게 진행될 때에는 정치적 휘발성도 강해진다. 그러므로 이명박의 승리를 아직까지 확정적으로 볼

수 없다.

혹여 보수 세력이 집권한다 할지라도 그것이 노동운동의 대규모 패배로 자동으로 이어지는 것은 아니다.

집권한 우파가 대중의 생활 조건을 공격한다면 아래로부터의 반격 또한 만만치 않을 것이다. 우파 정권이 채택할 게 뻔한(행여 정동영이 되더라도 마찬가지인) 신자유주의 공격과 전쟁 동참은 이미 노무현 정부가 지난 5년 동안 밀어붙이다 총체적 위기에 빠진 계획이다.

무엇보다, 노동자들은 이미 한나라당의 전신인 신한국당 정부에 도전해 승리한 경험에 있다. 1996년 말과 1997년 초 민주노총 노동자들은 노동법 개악 반대 파업을 벌여 신한국당의 김영삼 정부를 굴복시킨 바 있다. 이 파업의 여파로 신한국당은 집권 연장에 실패했다.

프랑스 노동운동은 우파 정부의 집권이 곧 노동운동의 침체로 이어지지 않는다는 점을 보여 주는 또 다른 사례다. 지금 프랑스 노동자 운동은 공공부문을 필두로 사르코지 신임 정부에 반격을 가하고 있다.

마지막으로, 현 국면에서 반한나라당 후보들의 단일화를 주장하는 것은 사실상 민주노동당 후보가 대선에 출마하지 말라는 것이나 다름없다. 그런 점에서 권영길 후보는 정동영이 ‘삼성 비자금 특검법 발의’를 혹시라도 ‘범여권 단일화’와 연계시킬 가능성을 철저히 경계·차단해야 한다.

더구나 ‘삼성장학생’으로 의심받는 정동영이 삼성 비자금 문제 해결을 위해 진지하게 노력할지도 의심스럽다.

권영길 후보는 범여권과 분명히 선을 긋고 독자적인 진보진영 대표로서 위상을 분명히 해야 한다.

민주노동당이 대선에서 획득한 표는 주류 정당들에 대한 좌파적 반대가 얼마나 거대한지를 시위하는 효과를 낼 것이고, 다음에 운동을 건설할 때 소중한 밑거름이 될 것이다.

프랑스 사르코지에 항의하는 시위
— 프랑스 진보운동은 설사 우파 정부가 집권하더라도 자동적으로 운동의 침체로 이어지는 것은 아님을 보여 준다

반한나라당 전선이 민주노동당에 도움이 되지 않는 이유

김하영

최근 반한나라당 전선을 구축해야 한다는 주장이 부쩍 두드러진다. 그것이 꼭 후보 단일화(범여권에 민주노동당 권영길 후보까지 포함시키는)를 촉구하는 것은 아니다. 후보 단일화는 부적절하다면 서도 반한나라당 연합 전선을 강조하기도 한다. 자민통 진영의 단체들 상당수가 이런 입장인 듯하다.

이들은 민주노동당 강화와 한나라당 집권 저지라는 “두 마리 토끼”를 모두 잡자고 말한다. 즉, 민주노동당 강화와 범여권 재집권이 모두 가능한 구도를 만들자는 것이다. 이런 일이 가능함을 보여주는 사례로 2004년 탄핵 정국을 꼽기도 한다.

하지만 그때는 대중의 분노가 한나라당을 향했다면 지금은 정확히 범여권을 겨누고 있다. 대중은 깊은 환멸만 남긴 범여권을 이번 대선에서 심판하기를 원한다.

“두 마리 토끼”를 잡자는 사람들은 그러기 위해 “민주노동당과 중도개혁세력이 서로에 대한 공격을 자제하고 친미보수세력과 한나라당에 공격의 화살을 집중”해야 한다고 주장한다. “진보개혁세력의 단합된 대응”, “한나라당과 친미보수세력[에 대한] [진보개혁세력의] 협공”이 촉구되고 있다. 정식으로 선거연합을 구성하는 것이 아닐 뿐, 거의 인민전선에 가까운 것을 제안하고 있는 것이다.

이들이 추구하는 “반보수대연합”의 고리가 되고 있는 것은 남북관계(통일)다. “반한나라당 공동투쟁의 목적은 어디까지나 한나라당의 집권을 저지하고 6.15 정권[6.15 공동선언을 이행할 수 있는 정권을 뜻함 — 필자]을 창출하여 6.15 공동선언에 따라 낮은 단계의 통일을 실현하는 것이다.”

“북이 낮은 단계 연방제안을 제기한 것은 화해 협력적인 남북정권을 상대로 통일을 실현하겠다는 의도”이고 “자주적인 정권이 수립되지 않은 조건에서 통일을 하루빨리 이루겠다는 현실 타개책”이다 (《통일, 우리 민족의 마지막 블루오션》, 전상봉). 따라서 통일을 우선적 과제로 여긴다면, 북한이 통일 상대로 여기는 ‘개혁 평화’ 세력 재집권을 돕지 않을 수 없다.

최근에 자민통 진영이 강조하고 있는 “10.4 선언 이행을 위한 범국민운동”도 6.15 정권을 창출하는데 이바지하기 위한 운동이라 할 수 있다.

자민통 진영은 현재 정국의 핵심

이 북미관계(와 남북 정상회담)이고, 이것이 대선에 결정적 영향을 미치리라고 본다. 이런 “정세의 역동성”이 한나라당의 지지율도 하락시키고, “선거연합과 후보단일화 없이도 충분히 진보진영 강화와 6.15 정권 창출이라는 양대 목표를 달성”할 수 있는 분위기를 만들어 주리라는 기대도 한다.

하지만 “정상회담 이후 분위기[가] 이전과 크게 달라지”리라는 기대는 어긋나고 있다. 더구나 “낮은 단계의 연방제” 실현을 위해 범여권과 함께해야 한다는 생각에 발이 묶여 민주노동당이 독자적 대안을 내세우지 않자 오히려 민주노동당이 묻히는 효과를 내고 말았다.

이것은 민주노동당이 노무현 정부의 ‘개혁’ 사기에 환멸을 느낀 개혁 염원 대중의 지지를 이끌어내는 데서 약점으로 작용하고 있다. 민주노동당이 범여권과 “단합”해 한나라당을 “협공”해서는 지난 10년 동안 민중의 삶을 파탄낸 이른바 “개혁 세력”과의 차이를 선명히 드러낼 수 없다.

교두보

게다가 “반한나라 전선”은 선거날짜가 다가올수록 후보 단일화 쪽으로 기울 위험을 안고 있다. “진보진영 강화와 6.15 정권 창출”을 모두 할 수 있는 상황이 아님이 갈수록 분명해진다면 6.15 정권 창출을 위한 결단이 필요하다는 목소리가 강화될 수 있기 때문이다.

“진보진영 강화를 최우선에 두”는 입장이라 해도 먼저 “낮은 단계의 연방제”를 거치고 그 뒤에 “자주적 민주정부[를] 수립”한다는 전망을 추구하다 보면 이번 대선에서 후보 단일화를 이루는 것이 배신적 타협이기는커녕 미래를 위한 교두보로 여겨질 수도 있다.

민족 통일과 화해·협력을 가장 중시하는 전략은 포퓰리스트 정치인들의 책략에 놀아날 위험에 처하기 마련이다. 한국에서 민족적 과제가 그 자체로는 반제국주의적이지 않기 때문이다. 범국민행동의 날(11월 11일) 노동계급이 내놓은 요구들, 즉 비정규직 폐지, 한미 FTA 반대, 미국의 제국주의적 전쟁 동참 반대 같은 진정한 반제국주의적 요구들은 ‘통합민주당’이 아니라 민주노동당이 수용하고 있다. 이것이 반한나라당 전선을 통한 ‘진보개혁세력’의 협력이 옳지 않은 까닭이고, 민주노동당의 후보를 지지해야 하는 까닭이다.

누가 더 부패한 우익인지 가늠하기 힘든 이회창과 이명박의 아귀다툼

‘비리 재판기’ 이명박이 자초한 ‘우파 내전’

‘차떼기’ 이회창이 있지도 않은 “좌파정권 종식”을 외치며 대선 3수 도전에 나섰다. 이 시대 착오적 꼴통 우익을 관 속에서 깨운 것은 다른 아닌 이명박이다.

BBK 등 온갖 비리와 부패로 톨툴 뭉친 이명박 ‘시한폭탄’이 폭발해 대선 전에 ‘유고’될 가능성이 커져 온 것이다. ‘언제 어디서나 터지는 비리 애니콜’이라는 이명박은 이제 ‘비리로 비리를 둘러막을’ 정도다. 최근 이명박 아들·딸의 ‘유령 직원’ 논란에 쏠렸던 시선은 이번 주에는 김경준 귀국으로 집중될 것이고 이명박 ‘시한폭탄’의 폭발 가능성은 더 높아질 것이다.

이 때문에 우파들 사이에서도 과연 이명박에게 정권교체를 믿고 맡길 수 있나 하는 불안감이 커졌고 이회창은 이 틈을 파고들었던 것이다. 여기에 정치 양극화가 낳은 모순이 상황을 증

폭시켰다. 우익인 이명박은 ‘산토끼’에게 다가가기 위해 우익적 본색을 가리며 기회주의적으로 처신해 왔다. 그래서 이명박은 지지율 50퍼센트를 넘을 수 있었다. 이것이 정치 양극화 속에서 더욱 우경화하는 우익들에게는 못마땅했다. “10년 단골손님은 푸대접하고 새로 온 손님에게 굽신거린 것이 보수 진영에게 안 좋게 보인 것”(〈독립신문〉대표 신혜식)이다.

이명박 측은 이제 ‘집토끼’들을 겨냥해 자신들이 “진짜 보수”라고 강조하고 있다. 이명박과 이회창 모두 앞다퉈 박정희 생각을 찾고 있다. 그러나 우익 선명성 경쟁은 이명박의 지지자 중 ‘산토끼’들을 쫓아내 정권 탈환 가능성을 낮출 수 있다. 게다가 이회창·이명박의 진흙탕 폭로전과 아귀다툼은 둘 모두에게 치명적인 타격을 가할 수 있다.

정동영의 ‘왼쪽 깜박이’가 쇼였음을 증명한 ‘묻지마 통합’

‘우파 내전’ 속에서도 정동영과 범여권은 지리멸렬하다. 지난 5년 동안 사무친 배신의 기억이 ‘왼쪽 깜박이’ 몇 번 켜다고 사라질 리 없는 것이다. 다급해진 정동영은 민주당과 후보단일화·합당을 선언했다.

그러나 ‘도로 열우당’을 넘어 ‘도로 민주당’까지 이어지는 ‘묻지마 통합’은 위기를 해결하지 못한다. 두 사기꾼을 합쳐서 생길 시너지 효과는 없다. 자이툰 파병 재연장과 금산 분리 완화를 지지해 온 이인제와의 단일화는 정동영의 ‘왼쪽 깜박이’가 쇼였음만 증명한다. 오죽하면 독재 정권의 단골 하수인이던 ‘고건 대안론’이 제기되고 있겠는가.

문국현도 노무현 정부의 “대북정책이 지나치게 자주적”이라는 등의 황당 발언들 때문에 알수록 커지는 불신 속에 지지율이 정체하고 있다.

결국 누구도 개혁·진보 염원 대중에게 대안이 되지 못하면서 이명박과 이회창의 지지율 합계가 60퍼센트에 달하며 1·2위를 다투는 상황이 벌어지게 된 것이다. 이것은 사회의 보수화나 운동의 침체를 뜻하지 않는다.

반신자유주의 운동이 계속 성장해 온 프랑스에서도 2002년 대선 때 우파인 시라크와 극우 르펜이 대선에서 1·2위를 한 바 있다. 전임 사회당 정부의 배신이 이런 얄궂은 상황을 만들어 냈지만 시라크 정권 하에서도 프랑스 진보진영은 CPE 반대 투쟁 등을 통해 전진했다.

‘도로 민주당’에서 다시 만난 사기꾼들

지금 한국의 정치 양극화 속에서 더욱 반동화한 우익들이 날뛰는 상황의 또 다른 한 편에, 전쟁과 신자유주의에 대한 대중적 반감이 존재한다.

민주노동당 권영길 후보는 범국민행동의날 집회에서 당당하게 한미FTA와 비정규직 악법, 이라크 파병에 반대하고 이견희 구속을 촉구하는 연설을 하며 진보 대표임을 입증했다. ‘우파 내전’이 만들 불안정성과 범여권의 지리멸렬 속에 민주노동당이 진보적 의제를 일관된 주장과 실천으로 대변한다면 “반격의 돌파구”를 찾을 수 있을 것이다.

혁명은 비극으로 끝날 수밖에 없는가?

마이크 헤인즈

[수정주의 역사학자들에 따르면] 혁명은 나쁜 일이다. 적어도 사회 혁명은 그렇다. 혁명이 최상층의 정치적 변화에 한정된다면 그건 괜찮다. 변하는 것은 단지 케이크 위에 얹힌 크림일 뿐이니까 말이다. 언젠가 프랑스 혁명이 바뵈프가 말했듯이, 그런 혁명은 한 무리의 도적들을 다른 무리로 바꿀 뿐이다.

진짜 문제는 ‘약탈’ 과정 전체를 위협하는 혁명이다. 그런 혁명에서는 누가 사회와 자원을 통제할 것인가가 중요한 문제로 부각된다.

어느 역사가의 표현을 빌리자면, 바로 이때 혁명이 ‘납치’된다. 다른 사람의 표현을 빌리자면, 혁명은 자체력을 잃고 스스로 몰락한다. 또 다른 사람의 표현으로는, 혁명이 자식들을 집어삼키기 시작하는 것이다.

이것은 사회 최상층부에 있는 사람들에게 대단히 위안이 되는 이론이다. ‘너희들은 우리만큼 강해질 수도, 부유해질 수도 없다. 우리가 너희들의 운명을 좌우하지만, 괜히 평지풍파를 일으키지 말아라. 결국 손해를 보는 건 너희일 것이다. 우리의 힘과 부를 봐라. 우리가 너희를 지배하기 때문에 우리 모두 자유를 누리는 것이다. 그러나 너희들이 열심히 일해서 우리를 더 부유하고 강하게 하는 것이 가장 나은 일이다.’

이것은 보수주의자들과 보수주의 역사학자들이 오랫동안 주장해온 해묵은 얘기다. 그러나 한때 진보적이었던 역사학자들이 지난 20~30년 동안 이런 주장을 다시 반복했다. 그들은 러시아 혁명의 실패가 ‘필연적’이었다고 말한다.

수정주의

그들은 이렇게 주장한다. ‘모든 혁명은 실패한다. 그리고 러시아 혁명은 그 중에서도 최악의 실패였다.’ 이른바 이런 수정주의자들은 때때로 새로운 미사여구를 동원해 자신의 주장을 포장한다. 그러나 결국 그들은 극단적 사상·과대망상·군중심리·권력을 잡은 정신병자 등의 위협에 관한 뻔한 주장을 되풀이한다.

메시지는 단순하다. ‘세상이 달라질 수 있다는 말을 믿지 말라. 인내심을 가지고 점진적 개혁에 만족하라.’

진실은 사뭇 다르다. 혁명은 분명 혼란스럽다. 그러나 또한 혁명은 창조적이다.

1917년 말 혼돈 속의 러시아에서 <가디언> 기자 모건 필립 프라이스는 이렇게 말했다. “도시·마을·병사들의 주둔지에 혁명 평의회들이 존재하지 않았다면, 혼란이 오십 배는 더 심각했을 것이다. … 물론 영국과 그



1917년 페트로그라드의 차르 궁전 밖에 모인 시위대

동맹국들의 지배계급, 이곳[러시아] 부르주아지의 입장에서는 자신이 살아남으려면 러시아 혁명으로 연결된 모든 운동들을 비난하는 것이 당연하다.”

여기에는 수정주의 역사관을 반박하는 강력한 메시지가 담겨 있다. 진정한 혁명에서 사회는 양극화한다. 사람들은 시험대에 오르거나 어느 한 쪽 편에 서게 된다. 이런 일이 어떻게 전개되느냐가 다음에 일어날 일에 영향을 미친다.

러시아 혁명은 당시까지 가장 참혹한 전쟁의 와중에 일어났다. 러시아 혁명은 그런 전쟁을 끝내고, 그것을 초래한 사회를 타도하려는 시도였다. 그러나 전쟁을 초래한 러시아 안팎의 세력들은 혁명을 파괴하기 위해서로 협력했다. 러시아 혁명은 자신의 내적 논리가 아니라 개입과 내전에 의해 ‘일탈’했던 것이다.

러시아의 구질서 세력이 특권을 되찾으려 했다면, 러시아 밖에서는 혁명의 성공을 두려워했다. 레닌은 ‘모든 요리사가 [사회를] 운영할 수 있다’고 말했다. 그러나 반혁명은

언제나 특권을 고수하고 아래로부터의 도전 을 분쇄하려 한다. 1917년 러시아에서는 유혈 사태가 거의 없었다. 희생자가 늘어난 것은 1918~1921년 동안이었다.

이미 제1차세계대전에서 수백 만의 목숨을 희생시킨 각국 정부들은 러시아에서 반혁명을 지원하는 데 흔쾌히 응했다. 상황이 절망적이었기 때문에 절박한 조치들이 불가피했다. 그런데도 오늘날 역사가들은 모든 책임을 혁명가들에게 떠넘기는 데 열을 올린다.

그러면 스탈린을 낳은 [혁명의] 퇴보가 1917년부터 필연적이었다고 주장하기가 쉬울 것이다. [그러나] 그것은 사실이 아니다. 스탈린은 혁명의 [국제적] 확산이 실패하고, 외국이 지원한 ‘내전’으로 러시아 사회와 혁명을 일군 대중이 와해되면서 생긴 공백 덕분에 권력을 장악할 수 있었다.

레닌과 스탈린의 연속성을 강조하는 보수적 견해가 거의 20년 동안 득세했다. 올란도 피제스(Orlando Figes)가 러시아 혁명에 대해 쓴 <민중의 비극> 같은 책들은 혁명에 대한 비판주의를 유포했다. 이런 비판주의는

학교 교과서에 반영됐고 미래의 고분고분한 노동자들을 만들어내는 데 일조하고 있다. 한동안, 그러니까 1990년대에 마치 역사가 끝난 것처럼 보였던 잠시 동안, 이런 비판주의가 옳은 것처럼 보였을 수 있다. 미적지근한 시대는 뜨거운 사건들에 대한 미적지근한 얘기를 요구했다.

도전

그러나 러시아 혁명 90주년을 맞는 올해는 상황이 다르다. 신자유주의가 자신의 약속을 실현하는 데 실패하면서, 한때 급진주의자였던 사람들[수정주의 역사학자들]의 자기만족은 새로운 세대의 도전을 받고 있다.

불평등은 커지고 계층이동은 감소하고 전쟁은 끝날 기미가 보이지 않는다. 새로운 시대에 옛 논쟁이 재연되고 있는데, 그것은 최근의 상황 변화 때문이다.

1917년과 마찬가지로 우리는 전쟁의 포연 속 이라크 속에서 자유주의자들과 그들의 신념을 평가하고 있다. 그들의 현실주의가 우

[편집자 주] 올해는 러시아 혁명이 일어난 지 90년이 되는 해이다. 이를 기념해 2회에 걸쳐 러시아 혁명 90주년 특집 기획을 연재한다.

1회 ① 1917년 러시아 혁명 — 다른 세계의 가능성을 보여 준다
② 혁명을 지키기 위한 투쟁
③ 혁명의 국제적 파장

2회 ④ 혁명은 비극으로 끝날 수밖에 없는가?
⑤ 노동계급을 이끈 정당

노동계급을 이끈 정당

1905년 러시아 [혁명]에서 1989년 베를린 장벽 붕괴까지 20세기는 혁명의 시대였다. 그러나 노동계급이 권력 장악에 성공한 혁명은 1917년 러시아 혁명뿐이었다. 1917년 [러시아] 혁명은 무엇이 달랐는가?

칼 맑스는 자본주의 사회에서는 자생적 저항이 반드시 나타난다고 주장했다. 소수 특권층은 정치·경제 권력을 모두 소유·통제하고 터무니없이 부유하게 사는 반면 압도 다수의 평범한 사람들은 쥐꼬리만 한 수입을 위해 장시간 노동에 시달려야 하는 사회 체제에는 긴장이 있을 수밖에 없다.

그러나 자생적 투쟁이 아무리 고무적일 지라도 그런 투쟁만으로는 승리할 수 없다는 것이 역사의 교훈이다.

노동자 혁명이 성공하려면 사회주의 조직도 필요하다. 자생성과 조직은 서로 대립하지 않는다. 둘 다 혁명의 성공에 필수적인 요소들이다.

러시아에는 볼셰비키라는 혁명정당이 있었기에 노동자·병사·농민들의 용감한 투쟁이 권력 장악으로 이어질 수 있었다.

레온 트로츠키가 썼듯이, 당은 계급투쟁이라는 증기를 밀어올리는 피스톤이다. 피스톤만으로는 힘을 낼 수 없지만, [피스톤에 의해] 압축되지 않은 증기는 사방으로 흩어져 힘을 잃고 말 것이다.

볼셰비키의 [사회적] 기반은 러시아의 가장 전투적인 사회 계층, 즉 노동자·병사·농민이었다. 볼셰비키는 노동계급과 분리돼 있지 않았다.

그들은 동료 노동자들과 함께 투쟁했고, 패배와 승리를 함께했고, 그렇게 투쟁을 이끄는 과정에서 동료 노동자들의 존경을 받을 수 있었다.

그러나 볼셰비키는 단지 최상의 활동가가 되는 데서 그치지 않았다. 그들은 전단·신문·소책자·서적 등을 발행해서 사회주의 사상을 전파하고, 반제국주의 투쟁에서 여성의 권리까지 온갖 문제에 대해 노동자들을 교육했다.

오늘날 [일방적] 명령을 거부하고 그 부당성을 따지는 사람을 가리키는 말로 널리 쓰이는 “볼쉬”(bolshy)라는 단어도 이 용감한 혁명가들에서 유래한 것이다.

볼셰비키 형태의 정당 조직을 가장 유명한 볼셰비키 지도자 이름을 따서 흔히 “레닌주의” 정당이라고 부른다.

독재적 지도부가 일방으로 명령하면 모든 회원은 기계적·맹목적으로 복종하는 것이 레닌주의 정당의 특징이라고 말하는 사람들도 있는데, 이는 잘못된 생각이다.

이런 생각은 [영국] 노동당 같은 정당에 더 잘 맞는다. 오늘날 노동당에는 당원들이 지도부의 조처나 견해에 도전할 수 있는 메커니즘이 없다.

노동당은 스스로 “광범한 교회”[영국 국교회 가운데 로마 가톨릭 전통을 강조하는 고(高)교회파나 반(反)로마 복음주의의]



연설 중인 레닌 — 레닌은 민주주의와 행동 통일을 결합시킨 당을 건설했다

성향의 저교회파와 달리 자유주의 신학 경향을 지닌 중도 교파(광교회파)를 빚낸 말라고 자랑한다. 그러나 이 말은 노동당이 기업주와 노동자, 흑인과 인종차별주의자, 동성애자와 동성애 혐오자를 모두 당원으로 받아들인다는 뜻이다.

혁명정당은 인종차별에 대해 단 하나의 견해를 갖고 있다. 간단히 말해, 인종차별주의자들을 환영하지 않는다는 것이다.

혁명정당은 “광범한 교회”가 아니다. 혁명정당은 정치 의식이 가장 뛰어나고 가장 전투적인 노동계급 활동가들의 조직이다. 레닌은 이런 조직을 전위 정당이라고 불렀다.

볼셰비키 당은 대단히 민주적이었다. 레닌은 자신의 견해를 당원들에게 강요하지 않았다.

소수파

몇 번이나 볼셰비키 지도부 내에서 소수파가 된 레닌은 지도부와 일반 당원들 사이에서 논쟁을 벌여 동지들이 자신을 지지하게 만들어야 했다.

그러나 모든 상황에서 레닌이 항상 해답을 갖고 있었던 것은 아니다. 그는 노동자들의 경험을 귀담아 들었다.

지도자로서 레닌의 강점은 계급에게 배워 정책을 바꿀 수 있는 그의 능력과 자세였다.

예컨대, 1905년 혁명 때 노동자들은 처음으로 노동자 평의회(소비에트)를 건설했다. 소비에트는 레닌이 발명한 것은 아니었지만, 레닌은 그것이 얼마나 중요한 도구인지를 깨달았다.

그는 소비에트가 노동자·농민이 사회를 조직하는 대안적 민주주의의 기구가 될 수 있음을 예견했고, 1917년에 소비에트 권력을 지지했다.

레닌주의 조직의 핵심 특징 가운데 하나는 민주적 중앙집중주의라는 당내 민주주의이다.

당 기구들과 당원 전체의 토론을 거쳐 일정한 행동 방침이 결정되면 모든 당원은 예외없이 그 결정에 따라야 한다.

이것은 주류 정당들의 모습과 사뭇 다르다. 국회의원들은 [4~5년에 한 번씩] 선출되고, 심지어 그들이 특정 정점에서 자신을 선출한 유권자 다수의 견해와 어긋나게 표결하더라도 다음 총선 전까지 그들을 소환할 수 없다.

그러나 노동조합원들에게는 민주적 중앙집중주의가 아주 익숙할 것이다. 표결을 통해 다수가 파업을 하기로 결정했으면, 파업에 반대파를 던진 조합원을 포함한 모든 조합원들이 파업을 지지해야 한다. 그렇지 않으면, 노동계급이 가진 단 하나의 진정한 힘 — 집단적 힘 — 을 잃어버릴 것이다.

볼셰비키는 어떻게 싸워야 승리할 수 있는지를 그들의 행동으로 거듭거듭 입증함으로써 노동자·농민을 대거 당원으로 가입시킬 수 있었다.

당시 한 노동자는 이렇게 말했다. “볼셰비키는 항상 ‘우리가 아니라 삶 자체가 여러분을 설득시킬 것입니다’ 하고 말했다.”

세계 전역의 수많은 사람들이 여전히 전쟁·기아·착취에 시달리고 있다. 버마에서 베네수엘라까지, 체제에 저항하는 투쟁이 분출함에 따라 노동자들에게 어떤 종류의 정당이 필요한가 하는 문제가 어느 때보다 중요해지고 있다.

오늘날 혁명가들은 노동조합과 지역사회에서 적극적으로 일상 활동을 벌이고 있다. 우리는 아주 사소한 항의에서 거대한 파업까지 모든 투쟁에 참여하고 있다.

우리는 항상 [운동과 투쟁을] 전진시킬 실천적·구체적 방안을 내놓을 수 있기를 바란다. 우리는 또, 모든 저항 행동과 더 광범한 사회주의 이상 — 평범한 대중이 자신의 삶을 통제할 수 있는 사회 — 을 서로 연결시킨다.

혁명가들은 더 나은 세계를 위해 투쟁하고자 하는 사람들을 모두 지도하려고 애쓴다.

왜냐하면 미국인 기자 존 리드가 1917년에 러시아의 엄청난 투쟁을 보며 말했듯이, “노동자 대중은 위대한 꿈을 꿀 수 있을 뿐 아니라 그 꿈을 실현시킬 능력도 갖고 있기” 때문이다.

주디스 오어

파키스탄 계엄 반대 운동이 무샤라프의 숨통을 조이고 있다

리아즈 아흐메드

지금 패배의 그림자가 페르베즈 무샤라프와 그 지지자들을 엄습하고 있다.

무샤라프는 언론 매체의 입에 재갈을 물리면 자신에 도전하는 운동의 등장을 막을 수 있을 거라고 계산했다. 그러나 계엄령 반대 진영은 혹독한 탄압을 극복하고 투쟁의 수위를 더 높였다.

먼저, 변호사 운동이 계엄령 선포에 가장 단호하고 용맹하게 맞서기 시작했다.

그 뒤로, 예상하지 못한 곳에서 가장 큰 반대 시위가 터져 나왔다. 라호르 대학 경영학과 학생들이 경찰 탄압을 무릅쓰고 반대 행동을 시작한 것이다. 잇따른 학생 시위들은 21세기 첫 학생 운동의 탄생을 알리는 사건이었다.

처음에 몇몇 라호르대 학생들이 계엄령 선포 다음 날 오전에 열린 변호사들의 시위에 참가했다. 곧이어 수백 명의 학생들이 학내 시위를 벌였고, 참가자들의 수는 순식간에 2천 명으로 늘었다.

이것은 다른 학생들의 행동을 고무했다. 콰이드-이-아잠, 함다르드, 편잡 대학교, 그리고 과학기술진흥재단 학생들이 집회를 열고 행진을 했다.

학생들은 기본권인 표현의 자유가 부정되고, 빈부 격차가 심화되고, 군사적 충돌이 전국으로 확산되는 것에 분노했다. 그들은 중간계급의 양심을 대변하는 존재가 됐다.

확산

언론인들은 대중매체가 공격받고, 계엄령 선포 반대 의견의 유포가 차단되는 것에 반대하는 시위를 전국적으로 거의 매일 벌이고 있다. 단식 투쟁이 수요일[11월 14일]부터 카라치언론회관에서 시작되며, 목요일[15일]에는 같은 장소에서 토론회가 열릴 것이다. 다음 주 화요일[20일]에는 계엄령 선포 반대 행동이 전국적으로 열릴 것이다.

일부 활동가들은 국가 탄압을 피하기 위해 소수가 매일 여러 곳에서 잠깐 동안 시위를 벌이는 방식을 택했다. 카라치와

이슬라마바드에서는 이런 집회가 매일 열린다. 정치 활동에 거리를 두던 많은 청년들이 그런 저항 행동들에서 영감을 받아 투쟁에 합류하고 있다.

중간계급들의 다수가 전에는 이른바 ‘이슬람 근본주의’의 위협에 맞서 무샤라프 독재를 지지했다.

그러나 그들은 무샤라프가 미국과 영국의 지원을 받아 파키스탄 일부 지역을 폭격하면서도 다른 지역에서는 ‘이슬람 근본주의자들’과 타협하는 것을 봤다.

‘테러와의 전쟁’ 이후 파키스탄 군대가 파키스탄 북부에서 수백 명의 민간인들을 살해했다. 파키스탄군은 처음에 와지리스탄에서, 이제 스와트 지역에서 저항에 부딪혔다. 이 지역에서 파키스탄군은 패배했고 전의를 상실했다.

무샤라프가 위기에 빠지면서, 미국이 전 총리 베나지르 부토 같은 다른 동맹을 지지할 수도 있다. 부토는 ‘테러와의 전쟁’을 지속하겠다고 미국에 약속했다.

한편, 계엄령 반대 행동은 ‘테러와의

전쟁’에 대한 반대 정서에 힘입어 성장하고 있다. 경제적으로 안정된 미래가 보장됐다고 믿는 학생들조차, 무샤라프 독재가 계속되면 자신들이 전쟁·테러·고배 풀린 국가 탄압 속에서 기본권을 무시당한 채 살아야 함을 잘 안다.

저항 운동은 양보를 얻고 지나치게 빨리 타협할 가능성도 있다. 그러나 지배자들은 힘을 회복하는 즉시 양보 조치를 철회할 수 있다.

운동은 확산돼야 한다. 총파업은 체제를 뒤흔들어 지배자들을 제거하고 민중에게 자유를 가져다 줄 수 있을 것이다.

■ 〈맞붙〉 웹사이트의 관련 기사 ‘독재자 무샤라프에 맞서 싸우는 파키스탄 민중’을 함께 보시오.

리아즈 아흐메드는 카라치 대학교 생화학과 교수이고, ‘파키스탄 국제사회주의자들’의 지도적 회원이다. 현재 카라치에서 계엄 반대 운동에 참여하고 있다.

두 번째 파업에 돌입한 프랑스 노동자들

이 신문이 인쇄에 들어간 지금, 공공부문 노동자들은 10월 18일에 이어 두 번째 대규모 파업을 몇 시간 앞두고 있다. 프랑스공공철도 노조들은 11월 13일 밤부터 무기한 파업에 들어가기로 결정했고, 전력과 가스노조도 그 다음날 하루 파업을 단행한다.

사르코지의 특별연금 개악에 맞선 10월 18일 공공철도 24시간 파업은 큰 성공을 거뒀고, 다른 부문 투쟁을 고무하고 있다. 예컨대, 학생들은 노동자들과 연대해 신자유주의적 ‘대학자치법’을 폐기시키자고 나서고 있다.

이 법은 단과대학 사유화를 허용하고 국가의 재정 지원 의무를 경감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대학들은 민간 자본에게 손을 벌려야 한다. 결국 인기 있는 학과들에만 민간 자본이 몰리고, 인기 없는 학과의 재정이 빈약해지면서 그곳의 학생들은 지금보다 더 많은 등록금을 내야 할 것이다.

애초에 이 법을 둘러싼 논쟁이 있었지만 급진 좌파 학생들의 주장이 승리했다. 프랑스 최대 학생조직인 전국대학생조합

(UNEF)도 이 법에 반대하는 입장을 발표했고, 학생들에게 11월 20일 공무원 노동자 행동의 날에 적극 참가하라고 호소했다. 이미 일부 학생들이 11월 8일부터 대학 점거에 들어가 지금 30여 대학에서 부분 점거와 휴업이 진행중이다.

정치적 분위기도 급진화하고 있다. 사르코지에 일관되게 반대하지 못하는 사회당 인사들 대신 혁명적공산주의동맹(LCR)의 대선후보이자 대변인인 올리비에 브장스노가 대중의 반사르코지 정서를 대변하는 존재로 떠오르고 있다. 여론조사 결과 응답자 중 40퍼센트가 “프랑스 정치에서 브장스노의 정치적 영향력이 더 높아지기를 바란다”고 답했다.

지금은 과거의 경험을 되돌아 볼 때다. 1995년에는 공공·민간 등 부문을 초월한 무기한 전면 파업으로 우파 정부의 공공부문 연금 개악을 좌초시켰다. 그러나 2003년에는 우파 정부가 노조들을 분열시킬 수 있었다. 총연맹 지도자들의 잘못된 결정으

부문을 초월한 단결과 투쟁의 확산이 필요하다

로 운동이 결집하지 못하고 부문별 행동으로 파편화됐기 때문이다.

지금 프랑스 노동총동맹(CGT) 등 주요 노조총연맹들은 기층의 압력에 밀려 공공철도 무기한 파업에 합의했지만, 부문 간 투쟁을 결합하는 데는 부담을 느끼고 있다. 공무원노조는 일주일 뒤인 11월 20일에야 공무원 감축 계획에 항의하는 행동에 들어가기로 했다.

특히 아쉬운 것은 총연맹들이 민간 부문 노동자들에게 연대를 거의 호소하지 않는 것이다. 그러나 10월 말 에어프랑스 승무원들의 전투적 파업에서 볼 수 있었듯이 일부 민간 부문 노동자들은 신자유주의 개악에 맞서 싸울 준비가 돼 있다.

사르코지는 일부 노조 지도자들을 회유해서 2003년 상황을 반복하려 한다. 실제로 철도기관사노조(FGAA)가 정부와 개별 협상을 벌이기 위해 11월 13일 파업에 불참하겠다고 발표했다. 다행히 이들을 제외한 나머지 노조들이 프랑스공공철도 소속 노조원들의 거의 90퍼센트를 포괄하기 때문에 철도 파업은 여전히 강력할 것이다.

일부 지역에서는 노동조합총연맹 기층 활동가와 현장조합원들이 전체 회의를 열어 어떻게 부문을 초월한 단결된 행동을 만들어 나갈 것인지 논의했다.

1995년에도 전체 회의가 부문 투쟁들이 하나로 결집시키는 중요한 구실을 했다. 1995년 투쟁 구호인 “다 함께(Tous ensemble) 하는 투쟁”을 재현해 사르코지를 무릎 꿇게 만들 수 있을지 여부는 이런 아래로부터의 압력이 얼마나 강한지에 달려 있다.

김용욱



입시지옥을 없애는 길은 대학평준화뿐이다

입시폐지 대학평준화에 모두 나서자

이형빈
교사, '입시폐지 대학평준화
국민운동본부(준)' 정책위원

어지간한 입시 전문가가 아니면 도저히 이해하기 어려운 우리 나라의 입시 제도. 해방 이후 총 16번 바뀌었다고 한다. 그 변화의 흐름 속에 한 가지 변하지 않는 본질이 존재한다.

입시 제도가 자주 바뀌면 바뀔수록, 입시 제도가 복잡해지면 복잡해질수록 부유층 자녀에게 절대적으로 유리하다는 점이다. 그 이유는 간단하다. 빠른 변화·복잡한 제도에 고액의 사교육과 각종 정보를 통해 체계적으로 적응할 수 있는 사람은 바로 부유층이기 때문이다.

20년 전쯤에는 '학력고사', '선지원 후시험' 제도가 시행됐다. 과외는 금지됐고, 시험은 교과서에서만 출제됐다. 그래서 그 때는 '개천에서 용나는' 것이 가능했다.

그러나 지금은 다르다. 고액의 사교육으로 내신·수능·논술을 모두 준비해야 하고, 한번쯤은 해외 유학을 다녀와야 하고, 각종 대회 수상 경력이나 고득점의 TOEIC 성적이 있으면 더더욱 유리해지는 입시 제도의 관문을 노동자·민중의 자녀가 통과하기는 낙타가 바늘구멍을 통과하는 것만큼이나 어렵다.

그런 점에서 입시 제도는 철저히 계급 차별적 속성을 지니고 있다. 최근 서울대·연대·고대 신입생 중 서울 강남, 특목고 출신이 30퍼센트를 차지하고 있다.

'죽음의 트라이앵글'로 불리는 2008학년도 입시안은 사상 최악의 입시안이다. 여기에는 '학교별 평가(내신)', '전국단위 일제고사(수능)', '대학별 본고사(논술 및 면접)' 등 이질적인 평가 방식이 모두 결합돼 있다. 게다가 대학별로 학생 선발 방식을 따로 마련하도록 돼 있으며 수시·정시·일반전형·특별전형 등 그 종류도 다양하다.

저주받은 89년생

쉽게 말해 전국의 모든 대학이 두세 가지 선발 방식을 각각 따로 채택하고 있는 셈이다. 학생들은 혼란에 빠지고 사교육은 더욱 번성한다.

'저주받은 89년생'이라 불리는 지금의 고등학교 3학년 학생들은 입학하자마자 '내신 등급제'라는 괴물 때문에 '친구를 적으로' 만드는 가혹한 경쟁체제를 교실 안에서 접하게 됐다.

이들은 2학년이 되자 갑자기 '논술'이 당락을 결정한다는 소식을 듣게 된다. 5지 선다형 '찍기' 문제에 씨름하던 이들은 이제 느닷없이 '창의력 신장'의 깃발을 높이 들고 논술 학원을 다니기 시작했다.

그러더니 이들이 3학년에 올라오

자마자 주요 대학들이 수능 비중을 높인다는 소식을 접하게 돼 다시금 '창의력 신장'의 깃발을 내리고 EBS 수능 강의에 접속하기 시작했다.

참교육은 온데간데없고, '창의력'이니 '경쟁력'이니 하는 온갖 요란한 깃발만 나부끼고, 아이들은 '합격'이라는 새날이 올 때까지 흔들림이 없다.

입시 제도가 바뀔수록 경쟁은 더욱 치열해지고 사교육 시장은 더욱 팽창하고 아이들의 고통은 더욱 커져 갔다. 예비고사, 학력고사, 본고사, 내신, 수능, 논술, 면접 등 나올 것은 다 나왔다. 신자유주의는 입시 제도를 매개로 경쟁 이데올로기를 온 국민에게 내면화하며, 부모의 부와 권력이 자녀에게 대물림되는 계급 불평등 현실을 재생산한다.

변하지 않은 것은 오직 한 가지, 서울대를 정점으로 하는 대학서열체제다. 대안은 오직 한 가지, 대학평준화다. 대학평준화만이 아이들의 입시 고통, 노동자·민중의 사교육 부담을 없앨 수 있다. 승자독식의 야만적인 신자유주의 경쟁체제를 넘어 아름다운 연대 사회의 새로운 모델을 구축할 수 있다. 노동자·민중이 '입시폐지 대학평준화' 운동에 전면적으로 나서야 할 이유가 여기에 있다.

11·24 입시폐지 대학평준화 전국동시다발 범국민대회

일시: 11월 24일(토) 오후 5시 | 장소: 광화문 동화면세점 앞(수도권)
홈페이지: <http://www.edu4all.kr>

[편집자 주] 입시경쟁은 학생들에게 정신적·육체적으로 엄청난 고통을 줄 뿐 아니라 차별이나 두발 단속처럼 학생 인권을 무시하는 행위를 정당화하는 근거로 이용되기도 한다. 입시경쟁에 내몰린 학생들은 자신의 권리와 다른 사회 문제 등에 목소리를 내기도 힘들다.

이제 고등학교 3학년에 올라가는 이하람·성하림 학생이 입시체제 아래에서 느끼는 고통과 억압에 대해 얘기한다.

“학생을 입시 기계가 아니라 인격체로 봐 줬으면 좋겠어요”

고3이 다 되니까 점점 공부해야 한다는 압박을 느껴요. 놀아도 맘이 편하질 않아요.

일찌감치 공부를 포기한 애들도 많아요. 저희 반이 38명인데, 수학·영어 같은 주요 과목 시간에도 20명은 자고, 10명은 놀고, 앞에 8명만 공부해요. 그냥 공부하면 [대학 가기] 힘들니까 체육이나 밴드 하는 애들도 많아졌어요.

[학교는] 우리를 인격체로 봐주는 젊은 선생님들을 다 학생부에 보내요. '1년만 지나면 다 바뀐다'며 일부러 보내는 거 같아요. 실제 작년까지 멀쩡하던 선생님이 학생부에 가더니 갑자기 두발 단속도 엄격히 하고, 학생들이 시간이 부족해 매점에서 음식을 사서 들고 다니면서 먹는데 그러면 죽도로 막 때려요.

머리가 길면 몇 번 경고 주다가 봉사활동 같은 징계를 줘요. 선생님들은 학생들 의견은 무시하고 계속 단속해요. 두발 단속 규정을 결정하는 데도 학생들은 참가도 안 시키고 학교운영위에서만 논의한 거예요.

주말에도 주로 학원에서 보내요. 국·영·수 학원이에요. 과외도 하고요. 학원비만 30만 원이 넘고 과외는 과목 당 40만 원 정도예요. 요샌 학원 잘 다니고 있는데 부모님은 과외도 하라고 하세요.

학교가 없어졌으면 좋겠다고 얘기하는 친구들도 있어요. 학생을 입시 기계가 아니라 인격체로 봐 줬으면 좋겠어요. 저는 입시가 아니라면 자유롭게 동물을 키우고 싶어요. 새 같은 거 찾다니고, 관련된 책도 보고 공부하고 싶어요. 지금 꿈도 대학에 가서 생물을 전공하는 거예요.

(고등학교 2학년 이하람)

“취업만 생각하고 대학가는 건 정말 암울해요”

우리 고1 때는 내신이 엄청 중요하다고 해서 열심히 했는데, 고2가 되니까 이제 내신이 중요하지 않다는 거예요. 선생님들은 수능만 하라고 하더니 이제는 또 논술이 중요하다고 해요. 학교에서 논술 선생님이 열심히 가르쳐 주시기는 하는데, 논술 선생님이 자기 의견을 학생들에게 알려 주고 쓰라고 해요. 학생들이 자기 생각을 쓰는 게 아니라 결국 선생님이 모범 답안을 주는 거죠.

자율학습하면 오후 10시까지 학교에 있는데, 그러면 14시간씩 학교에 있어야 하는 거잖아요. 끔찍해요. 친구들 얼굴이 늘 지쳐 있어요. 입시에 관계없는 수업시간에는 다 자고, 입시에 관련 있는 수업시간에만 깨어 있는 거죠. 대학은 원래 공부하고 싶은 사람이 가는 곳인데, 지금은 취업하기 위해서 찍고 가는 곳이 됐다고 다들 지친다고 해요.

고1 때는 몰랐는데, 성적 받아올 때마다 부모님이 스트레스 받는다는 게 보여요. 그럼 저도 더 짜증나고 압박이 장난이 아니죠.

취업만 생각하고 대학가는 건 정말 암울한 거 같아요. 대학가서도 제가 하고 싶은 활동을 하고 싶어요.

(○여자고등학교 2학년 성하림)



‘다함께’의 기본 입장

노동계급의 자기해방

자본주의는 착취, 억압, 빈곤, 환경파괴, 전쟁 등을 낳는다. 이것은 자본주의 하에서 노동자들이 사회의 부를 만드는 데 생산과 분배를 통제하지 못하고 있기 때문이다.

우리는 노동자들이 부를 집단적으로 통제하고, 이윤이 아닌 인간의 필요에 따라 부의 생산과 분배를 민주적으로 계획하는 사회를 위해 싸운다.

오직 노동자들 자신의 대중 투쟁으로써만 자본주의 착취 · 억압 체제를 없애고 그러한 사회를 건설할 수 있다.

근본적 사회변혁

자본주의 체제 내에서 이뤄지는 점진적 개혁들은 착취와 억압을 끝장내지 못한다. 자본주의는 폐지되어야 한다.

자본주의 국가기관들은 중립적으로 운용되는 것이 아니라 피억압자들의 투쟁으로부터 지배계급의 이익을 보호하기 위해 사용된다.

노동계급에게는 완전히 다른 종류의 국가가 필요하다.

국제주의

노동자들은 국제적인 계급이고 근본적 사회변혁을 위한 투쟁은 국제적인 투쟁이다.

우리는 노동자들 사이의 민족적 분리를 극복하고 국제적인 노동계급 운동을 건설하기 위해 다른 나라 노동자들과의 연대를 지지한다.

우리는 한 나라의 노동자들을 다른 나라 노동자들에 맞서게 만드는 모든 것에 반대한다. 우리는 북한 난민과 이주노동자의 이주 규제에 반대한다.

우리는 제국주의 열강들의 세계 지배와 그들의 전쟁에 반대하고, 제국주의 지배에 맞서는 피억압 민족의 민족해방 운동을 지지한다.

근본적 사회변혁이 성공하기 위해서는 한 나라에 고립되어서는 안 되고 국제적으로 확산되어야 한다.

옛 소련과 동유럽처럼 북한과 중국과 쿠바는 진정한 사회주의가 아니다. 이 나라들도 노동자들을 착취하고 억압하는 비민주적 사회이다.

우리는 그 곳 노동자들이 지배 관료에 맞서 벌이는 투쟁을 지지한다.

남북한의 민중은 자신이 적합하다고 여기는 방식으로 통일할 권리가 있다. 그러나, 노동계급은 국제 변혁의 일환으로서 남북한 모두에서 근본적 사회변혁을 이루는 데까지 나아갈 필요가 있다.

억압으로부터의 해방

자본주의 하에서는 여성 차별, 인종 차별, 동성애자 차별 등과 같은 특정한 형태의 억압을 당하는 사회집단들이 있다. 이러한 억압들은 노동자들을 분열시키고 노동자 연대를 약화시키는 데 이용된다.

모든 형태의 억압에 반대해 민주적 권리를 옹호하는 투쟁은 근본적 사회변혁을 위한 투쟁에 없어서는 안 되는 한편, 근본적 사회변혁 없이는 억압으로부터의 해방이 불가능하다.

우리는 여성, 이주노동자, 동성애자, 그밖에 영세노점상과 철거민과 빈민 등 억압당하는 사람들이 자신을 지키기 위해 싸우는 것을 지지한다.

우리는 정치적 · 시민적 권리를 억압하는 국가보안법을 철폐하기 위해 투쟁한다.

현장조합원 운동

노동조합은 노동자들의 경제적 · 정치적 권리를 위한 투쟁에 없어서는 안 된다.

그러나 노조 지도자들의 역할은 자본주의와 협상하는 것이지, 자본주의를 끝장내는 것은 아니다.

우리는 노조 지도자들이 싸울 땐 그들을 지지하고, 그들이 노동자들을 배신하면 그들로부터 독립한 현장조합원 대중 행동을 건설한다.

변혁 정치조직

노동자들이 근본적 사회변혁을 이루려면, 가장 전투적인 노동자들이 변혁 정치조직을 건설할 필요가 있다.

근본적 사회변혁 지지자들은 노동자들과 억압당하는 사람들의 대중조직 속에서 활동함으로써만 변혁 정치조직을 건설할 수 있다.

우리는 개량주의 지도자와 개량주의 사상이 피억압 대중의 이익에 어긋남을 실천에서 입증해야 한다.

우리는 우리의 기본 입장에 동의하는 사람들 모두에게 변혁 정치조직을 건설하는 투쟁에 동참할 것을 촉구한다.



노동자대회 신문 판매를 통해 느낀 것

나와 동료들 몇몇이 노동자대회에서 <맛불> 신문을 판매하면서 느낀 점을 얘기해 볼까 한다.

“권영길 후보를 지지하자”는 <맛불>의 주장은 노동자들에게 큰 호응을 얻었다. 민주노동당이 우리 운동의 적이라도 되는 듯이 비난하는 초좌파적 · 종파주의적 유인물들과 반한나라당 · 반보수 연합 전선을 얘기하는 유인물들의 홍수 속에서, 이번 대선에서 민주노동당을 지지하며 주류 정치권에 맞서 운동을 건설하자고 주장한 <맛불>의 주장이 돋보였다.

신문을 팔면서 삼성과 이견희에 대한 노동자들의 불만과 분노가 매우 높다는 것을 알게 됐다. 삼성 비자금 문제를 다룬 기사를 보여 주지만 해도 신문을 구입한 사람들이 많았다. 이랜드 일반노조 김경욱 위원장의 인터뷰 기사와 투쟁 소식들을 담은 ‘소식/보고’면도 노동자들에게 인기가 좋았다. 노동자들은 비정규직 투쟁의 상징이 돼 있는 김경욱 위원장의 메시지를 귀담아 들으려 했다.

화물연대와 건설노조, 코스콤비정규직 등 지금 투쟁을 벌이고 있는 노동자들이 우리 신문에 관심을 보이고 구입했는데, 이것은 매우 기쁜 일이다. 지난 호 신문에 이주노동자들을 조직해 모범 사례로 실린 삼우정밀 노동자들도 신문을 구입했다.

가스공사노조와 발전노조 노동자들도 신문을 구입했는데, FTA 체결과 전력 사유화 추진 등 때문에 공공부문 노동자들이 투쟁을 준비하고 있다고 했다. 예년처럼 전교조 대열과 금속 대열에서 신문이 특히 많이 판매됐다. 한 노동자가 여러 부를 구입해 주변 동료들에게 나눠 주는 경우도 있었다.

몇몇 노조 간부들이 신문 판매를 문 제삼았지만, 그런 실랑이 속에서도 개의치 않고 신문을 구입하는 노동자들도 있었다. 낯선 사람들에게 정치 신문을 판다는 것은 어려운 일이지만 그 과정에서 노동자들의 의견도 듣고 우리의 주장들에 대한 지지도 확인할 수 있었다.

신정환



지난 호를 읽고...

권영길 후보의 공약들을 소개하는 기사가 좋았다. 앞으로도 많이 다뤄줬으면 좋겠다.

권영길 후보 지지에 소극적인 민주노동당 당원들은 심지어 ‘부르주아 언론 기자들이 써주고 싶어도 쓸 말이 없단다’며 냉소한다. 물론 대통령 선거는 정책보다 이데올로기 선거이고, 매니페스토라는 것이 때로 정책으로 승부하자며 투쟁을 비난하고 민주노동당에 온건화 압력을 가하는 것도 사실이지만, 계급의 요구를 선명하게 드러낼 수 있는 정책은 환영할 만한 일이다. 또, ‘정책이 없어 지지를 보낼 수 없다’는 식의 주장을 반박하는 데도 도움이 된다.

그런 의미에서 서민 소득 7퍼센트 증가와 불평등 9퍼센트 감소를 뜻하는 ‘서민 7.9’ 정책은 반가운 정책이다. 2002년의 무상으로 · 무상교육 · 부유세처럼 말이다. 무엇보다, 소득수준을 얼마 높이겠다는 것만이 아니라 불평등을 감소시키겠다는 것은 다른 당의 후보들은 낼 수 없는 정책이다.

김지현

최근 삼성 비자금 폭로를 보면 서 삼성에 맞선 싸움이 얼마나 중요하고 또 힘든지 느끼고 있는데, 고려대 출교에 맞선 투쟁 기사를 통해 훨씬 오래 전부터 삼성에 맞서 싸워오고 있으며 또 적잖은 승리를 거두고 있는 고려대 출교생들의 투쟁이 대단하다는 것을 실감할 수 있었다.

김종환

지역 사회 포럼

서울 중부

2007 대선과 진보정당의 과제

연사: 김인식(민주노동당 중구위원회 위원장)

일시: 11월 21일(수) 8시

장소: 인권실천시민연대 교육장
(4호선 한성대입구역 7번 출구
동소문 우체국 5층)

참가비: 2천 원

문의: 019-647-3309

서울 남부

2007 대선과 진보정당의 과제

연사: 김어진(민주노동당 서초구위원회 위원장)

일시: 11월 22일(목) 8시

장소: 방배1동 동사무소(방배역 3번 출구)

참가비: 1천 원

문의: 010-2401-1987

서울 동부

선출되지 않은 권력 —

삼성언어 어떻게 우리의 삶을 지배하는가?

연사: 임경옥(김성환 삼성일반노조 위원장 부인)

진지문(‘다함께’ 운영위원)

일시: 11월 22일(목) 7시 30분

장소: 여성능력개발원(건대역 6번 출구)

참가비: 2천 원

문의: 019-9731-7299

서울 서부

2007 대선과 진보정당의 과제

연사: 김어진(민주노동당 서초구위원회 위원장)

일시: 11월 21일(수) 7시 45분

장소: 신촌 새롬넷(신촌역 1번 출구)

문의: 017-267-0400

대학 맑스주의 포럼

충남대

신자유주의의 대안은 있는가?

일시: 11월 22일(목) 6시 30분

장소: 인문대 102호

문의: 010-7181-6562

부산대

선출되지 않은 권력 —

삼성언어 어떻게 우리의 삶을 지배하는가?

연사: 정종남(투기자본감시센터 기획국장)

일시: 11월 22일(목) 6시 30분

문의: 010-4569-0501

‘다함께’에
가입
하십시오

다함께는 정부나 기업으로부터 어떤 명목으로도 보조금이나 지원금을 받지 않습니다.
후원 계좌 : 국민은행 048402-04-014849 예금주 : 백은진



표시 하셨습니다?

그렇다면 ‘다함께’에 가입하십시오.

전쟁과 신자유주의적 세계화에 반대해 함께 투쟁합시다.



주간 <맛불>을
정기구독
하십시오

□ 6개월 / 2만 5천 원 (신문값 2만 원 + 우송료 5천 원)

□ 1년 / 5만 원 (신문값 4만 원 + 우송료 1만 원)

http://www.counterfire.or.kr

reader@counterfire.or.kr 전화: 02-2271-2395

계좌번호 국민은행 048402-04-014849 예금주 백은진

운수를 멈춰 세상을 바꾸자!

노무현 정부는 11월 9일 대국민 담화에서 철도·화물 파업은 ‘목적과 절차상 불법이며 불법 파업에는 법과 원칙에 따라 대응하겠다’고 협박했다.

또 화물연대 파업시 ‘업무개시 명령’을 내려 강제로 화물차를 운행시키겠다고 밝혔다. 화물연대 노동자에게 강제로 화물 운송 명령을 내리고 이를 어기면 처벌한다는 업무개시명령은 2003년 화물연대 파업 후 제정된 희대의 악법이다. 이것은 철도노조를 겨냥한 직권중재제도 못지 않게 노동3권을 부정하는 시대착오적인 악법이다.

이처럼 노무현 정부의 ‘법과 원칙’은 삼성 이견회의 온갖 불법 비리 앞에서는 흔적도 없이 사라지고, 노동자들의 정당한 파업 앞에 서만 살아난다.

그러나 철도 노동자들의 투지는 점점 높아지고 있다. 지난 7일 대전에서는 기관사 등 운전 분야 노동자 1천5백 명이 모여 1인승무저지, 해고자 복직, 구조조정 분쇄를 위한 파업에 앞장서자는 결의를 다졌다.

철도·화물 공동투쟁본부는 11월 15일 전국 다섯 곳의 거점에서



11월 7일 대전에서 열린 철도 노동자 결의대회

파업전야제를 진행할 예정이다.

철도노조의 파업 요구인 ‘1인승무 철회’는 철도 승객들의 안전과 직결된 문제이며 ‘철도 공공성 강화’는 일방적 요금인상 철회와 교통약자 보호 등을 담고 있다.

철도노조가 KTX·세마을호 승무원 직접고용을 요구하는 것도 찬양받을 일이다. 정규직 노조가 비정규직 정규직화를 요구하며 파업까지 한다면 그보다 더 멋진 일은 없을 것이다.

화물연대는 최근 계속되고 있는 고유가와 기업주들의 탄압으로 생존의 위기에 몰려 있다. 서울우유 두 조합원이 분신을 시도한 것도

그 때문이었다. 화물 노동자들의 노동3권 요구는 정말 절실하다.

철도·화물이 파업에 돌입한다면 하반기 진보진영 투쟁에도 큰 힘이 될 것이다.

노무현 정부 초기였던 2003년 5월 화물연대 파업과 6월 철도 파업은 노무현이 “대통령 못 해 먹겠다”고 말하게 만들었다.

이제 노무현 정부 말기에 철도·화물 노동자들이 막강한 공동 파업의 힘을 주저없이 발휘한다면 만성적 위기에 처해 있는 노무현에게 큰 타격을 주며 양보를 얻어낼 수 있다.

최용찬

11월 11일 범국민행동의날

온갖 방해로 뚫고 4만 명이 모이다

11월 11일 범국민행동의날에 노동자, 농민, 사회단체 회원 등 4만여 명이 서울 한복판에 모여 한미FTA 저지, 비정규직 철폐, 이라크 철군, 삼성 이견회 구속 등을 외쳤다. 이것은 노무현 정부의 온갖 탄압과 방해를 뚫고 이룬 값진 성공이었다.

권영길 후보의 지적처럼 “노무현 정권은 계엄정권같은 폭거를 자행”하며 “상상할 수 없는 극악한 방법과 비열하고 치사한 방법으로” 범국민행동의날을 막으려 했다.

11월 11일 새벽부터 전국 곳곳에서는 범국민행동의날에 참가하려는 사람들과 참가를 막으려는 경찰의 전투가 벌어졌다. 경찰은 농민회 대표자들을 집안에 가둬버렸고, 기차예매를 강제 취소시켰다. 전세 버스의 기사를 연행해 가거나 차량 열쇠를 탈취했다. 톨게이트에서 버스 안까지 올라와 검문했고 경찰차·소방차로 상경 차량을 막아섰다. 무려 4백50개 중대 6만4천 명의 병력이 동원된 이런 방해 때문에 수만 명이 어쩔 수 없이 상경을 포기해야 했다.

이런 탄압과 방해를 뚫고 시청 옆 도로를 가득 메운 4만여 명의 군중 앞에서 민주노총 이석행 위원장은 “노무현 정권은 즉각 퇴진하라”고 요구했다.

선관위와 경찰의 협박에 굴하지 않고 민주노동당 권영길 후보도 연설에



악랄한 탄압도 터져 나오는 분노를 막지 못했다

나섰다. 권영길 후보는 한미FTA 저지와 비정규직 악법의 전면 폐기, 삼성 이견회 구속 수사, 이라크 철군을 주장하며 “민중이 승리하는 새로운 역사를 위한 투쟁”을 호소했다.

광화문으로 행진을 시작하자 경찰은 2백30개 중대 2만3천여 명의 전경과 전경버스 6백여 대, 물대포를 동원해 폭력을 휘두르며 참가자들을 막아섰다. 경찰 헬기는 빌딩 사이로 위험천만한 저공비행을 하며 참가자들을 위협했다. 경찰 폭력 속에 60여 명이 부상을 입었고 1백20여 명이 연행됐다.

폭력과 탄압을 뚫고 광화문에 집결한 참가자들은 승리감 속에 정리 집회를 했다. 한미FTA 저지, 비정규직 철폐, 이라크 철군을 외친 범국민행동의날의 성공은 이런 공격에 맞서 각개약진이 아니라 모두 힘을 모아서 싸워야 하고 싸울 수 있

다는 것을 보여 줬다.

이런 대중 행동이 더욱 강력하게 확대될 때 우파들이 설치하는 대선 판도도 왼쪽으로 이동시킬 수 있다. 대중 행동은 참가자들에게 자신감을 주며 진정한 변화를 가능케 한다.

노무현 정부는 이미 ‘주동자 처벌과 손해배상 청구’를 들먹이며 보복에 나서고 있다. 이런 탄압에 단호하게 맞서며 운동을 방어하는 게 중요하다. 또 뉴코아·이랜드 등 비정규직 투쟁, 이라크 철군 투쟁, 삼성 비자금 투쟁 등을 더 강력하게 전개해 나가야 한다.

범국민행동의날 조직위원회는 1차 행동의 성공을 바탕으로 더욱 개방적인 자세로 2차 범국민행동의날을 건설해야 한다. 2차 대회도 전국적 힘을 서울로 집중하는 게 나을 것이다.

이정규

뉴코아·이랜드 투쟁

“우리의 투쟁은 결코 끝나지 않는다”

최근 정동영은 ‘진보 앵벌이’의 연장으로 비정규직 문제의 상징인 뉴코아·이랜드 노동자들을 찾아 왔다. 비정규직 악법 제정을 주도한 이목희와 함께 온 정동영은 사과도 없이 “비정규직 보호법의 선한 취지”를 들먹였다. “법의 정신은 구현해야 한다”고도 했다.

정동영이 옹호하는 그 “[악]법의 정신”에 따라 지금도 뉴코아·이랜드 노동자들은 고통받고 있다. 조합원들에게 1인당 수억 원의 손배가압류가 내려졌고, 연대 단체 회원들에게도 벌금이 수백만 원씩 내려졌다. 체포와 구속도 계속되고 있다.

그러나 민주노총은 노동자 대회 전야제를 흠에버 상암점 타격 투쟁으로 진행했고, 4천여 명의 참가자들은 강력 한 타격 투쟁으로 매출 분쇄를 성공시켰다.

범국민행동의날 오전에는 이랜드 본사 타격 투쟁이 있었다. 분노한 노동자와 학생들은 돌을 던져 유리창을 깨고 스프레이로 “박성수를 구속하라”는 구호를 남겼다.

민주노총 서울본부는 11월 27일 뉴코아·이랜드 투쟁 연대를 위한 간부파업을 준비하고 있다. 민주노총 서울본부는 투쟁 규모를 확대하기 위해 민주노동당과 사회단체 등에도 다양한 행동으로 동참

할 것을 호소하고 있다.

탄압 속에 투쟁이 장기화되고 민주노총의 생계비 지원이 늦춰지면서 뉴코아·이랜드 노동자들은 큰 어려움을 겪고 있지만 불굴의 투지는 꺾이지 않았다. 한 노동자는 “차비가 없어서 걸어서 연대의 현장으로 간다/ 밥값이 없어서 굶으며 투쟁의 현장으로 간다/... 우리의 투쟁은 결코 끝나지 않는다”라는 시로 결의를 표현했다. 뉴코아노조 박명수 쟁의부장은 이랜드 본사 앞 교통 관제탑에서 20일이 넘게 고공농성을 하고 있다.

이런 연대와 투쟁은 계속 박성수를 압박하고 있다. 재정적 압박에 시달리던 이랜드 사측은 결국 뉴코아 강남점을 매각했다. 인수·합병 후에 구조조정하고 되팔아서 차익을 챙기는 건 비열한 ‘먹튀’의 전형이다. 따라서 우리는 이것을 강력한 투쟁과 연대의 새로운 계기로 삼아야 한다.

박성수가 결정적 후퇴를 하지 않는 것은 그것이 가져 올 파장이 두렵기 때문일 것이다.

따라서 조직 노동자 연대 투쟁의 확대와 집중을 통해 결정적 타격을 가해야만 한다. 민주노총 이석행 위원장이 내년에 하겠다는 “세상을 뒤엎는 투쟁”이 가능하기 위해서도 지금, 이 투쟁과 승리를 건설해야 한다.

전지윤

이주노동자

표적·무더기 단속을 막아내자

정부는 최근 미등록 이주 노동자에 대한 살인적 단속 추방을 강화하고 있다. 이주 공동행동은 2주마다 출입국 관리소 앞에서 단속 추방 중단을 요구하는 집회를 하고 있다.

지난 13일에 열린 집회에도 이주공동행동, 이주노조, 서울일반노조, 공공노조 경인지부, 뉴코아·이랜드 노조, 기륭전자 노조, 아시아의 친구들, ‘다함께’ 등에서 20여 명이 참가했다.

집회에서 이주노조 이정원 교육선전차장은 “정부는 이주노조 활동가들을 표적 탄압하고 있다. 8월부터 10명의 조합원이 붙잡혔다. 네팔 이주노동자 스바스 동지는

말도 통하지 않는 끔찍한 화성보호소에서 벌써 5개월째 싸우고 있다”며 노동자들의 연대가 절실함을 알렸다.

또 “지난 10일 김포의 한 공장에 단속반이 들이닥쳐 토끼몰이 하듯 60여 명의 이주노동자를 붙잡아 갔다. 며칠 전 안산에서는 버스 5대에 이주노동자들을 싣고 갔다”며 항의 목소리를 모으는 것이 시급함을 호소했다.

오는 20일 11시에 출입국 관리소 앞에서 단속 추방 중단을 요구하는 집회가 열릴 것이다. 이주노동자들의 인권과 노동권을 위해 더욱 많은 사람들의 연대가 절실하다.

강여진



천주교정의구현사제단(이하 사제단)은 신임 검찰총장 내정자 임채진, 국가청렴위원장 이종백, 대검중수부장 이귀남 등이 삼성 '떡값 검사'라고 폭로했다. 이들은 '떡값 검사'의 일부에 불과하다.

이것이 이견희 일가가 온갖 불법과 비리를 저지르고도 털끝 하나 다치지 않았던 비결이다.

김용철 변호사는 삼성 본관 27층에 현금 봉치와 각종 상품권 등이 쌓여 있는 비밀 금고가 있고 수시로 대형 가방에 담겨 옮겨졌다고 폭로했다. “삼성의 SM5 1호 신차는 국세청장의 몫”이었다. 삼성이 우파적 여론 조성을 위해 ‘반핵 반김 국민대회’ 등을 주최한 극우익들에게 몇억 원씩 ‘용돈’을 쥐었다는 것도 밝혀졌다.

삼성의 떡고물로 자라난 언론, 법조계, 정치권은 ‘삼성 구하기’ 작전을 펴고 있다. 신정아 누드 사진을 보도하며 “국민의 알 권리”를 말하던 언론이 이 문제에서는 입을 닫고 있다.

〈시사IN〉에 따르면, 조선·KBS·MBC 뿐 아니라 〈한겨레〉조차 처음에는 김용철 변호사의 고발 보도를 주저했다. 〈머니투

이견희와 공범들을 모조리 구속 · 처벌하라

데이〉는 되레 김용철 변호사의 폭로 문건이 “이[견희] 회장의 세심한 경영스타일을 잘 보여 주고 있다”며 이견희를 찬양했다.

‘대한변호사협회’는 김용철 변호사가 “변호사의 비밀 준수 의무를 위반했으니 징계하겠다”고 한다.

‘삼성장학생’이 득시글거리는 국회 또한 ‘의무’를 다했다. 김용철 변호사를 국회 증인으로 부르려던 노회찬 의원의 시도는 한나라당과 통합신당 의원들의 방해 속에 무산됐다.

“삼성이 관리하는 작은 조직”이라는 검찰은 ‘떡값’의 효과를 가장 잘 보여 주고 있다. 삼성이 증거를 인멸할 수 있도록 시간을 끌던 검찰은 ‘떡값 검사’들의 온상으로 알려진 중앙지검에 이 사건을 배정했다.

사제단 김인국 신부는 “여러 가지 경우에 중에 최악이며 결국 [검찰이] 장난치겠다는 소리”라고 개탄했다. X파일 때처럼 시간을 끌며 물타기를 하다가 결국 김용철 변호사만 희생양 만들려는 게 저들의 작전인 듯하다.

청와대

“검찰을 믿고 지켜보겠다”는 노무현의 청와대야말로 ‘삼성이 관리하는 큰 조직’이라 할 수 있다.

심상정 의원의 지적처럼 노무현 정부는 “삼성에겐 돈과 머리, 사람까지 다 빌렸다.” 노무현의 밝혀지지 않은 대선자금부터 의심받고 있다. ‘2만 달러 시대’, ‘동북

아 금융 허브론’, ‘기업하기 좋은 나라’ 등은 모두 삼성에서 나온 얘기다.

전 정통부 장관 진대제, 전 주미대사 홍석현, 전 금감위원장 윤증현, 국가정보원 최고정보책임자 이연호 등은 모두 삼성 출신이다. 김용철 변호사는 심지어 “참여정부의 [자료 인선]을 삼성 구조본 팀장 회의에서 논의했다”고 폭로했다.

지금 삼성 비자금 앞에 ‘꿀 먹은 병어리’가 돼 있는 이명박은 더러운 유착 관계의 유력한 계승자다. 이명박은 금산분리 폐지를 공공연히 내걸 만큼 ‘삼성맞춤형’ 대선 후보다. 삼성증권 대표에서 우리은행장을 거친 황영기는 지금 이명박 캠프의 경제살리기 특위 부위원장이자. 이명박 캠프 홍보 전략팀장 지승림은 삼성 구조본 홍보담당 부사장 출신이다.

이처럼 도처에 포진한 ‘삼성장학생’들의 횡방 때문에 민주노동당이 제안한 특검 도입은 물건너 가는 듯했다.

그러나 사제단의 명단 공개 등으로 삼성 비난 여론이 계속 커지고, 범여권의 지리멸렬이 계속되자 정동영도 권영길·문국현과 회동에서 ‘삼성 특검법’ 발의에 동의했다. 물론 정동영은 이를 반한나라당 전선 구축에 이용하려 할 것이다.

따라서 민주노동당은 이번 합의를 범여권 후보단일화 논의로 연계하려는 모든 시도를 철저히 차단·경계해야 한다.

사실 정동영과 범여권은 이미 지난 X파일 사건 때도 한나라당과 힘을 합쳐 ‘삼성

X파일 특별법’ 통과를 막은 바 있다.

이번 3자 회동에서도 정동영은 ‘직권상정을 해서라도 특검법을 통과시키자’는 권영길 후보의 제안을 거부했다. 생색만 내려는 의도를 내비친 것이다. 특별검사를 누구로 선정할 것인지, 기간과 증인채택 범위 등을 놓고 지리한 공방을 벌이다 결국 흐지부지될 수도 있다.

민주노동당은 삼성과 일관되게 맞서 싸워 온 세력을 대변해 왔다. 심상정·노회찬 의원은 온갖 방해에도 굴하지 않고 삼성과 맞서 싸워 왔고 권영길 후보는 범국민행동의날 연설에서 이견희 구속 수사를 강력 촉구했다.

민주노동당은 김성환 위원장 등 삼성 무노조에 맞서 싸워 온 노동자들, 이견희에 맞섰던 고려대 출교생들, 시민사회단체 등과 연대해 삼성에 맞선 아래로부터 저항 건설에 주력해야 한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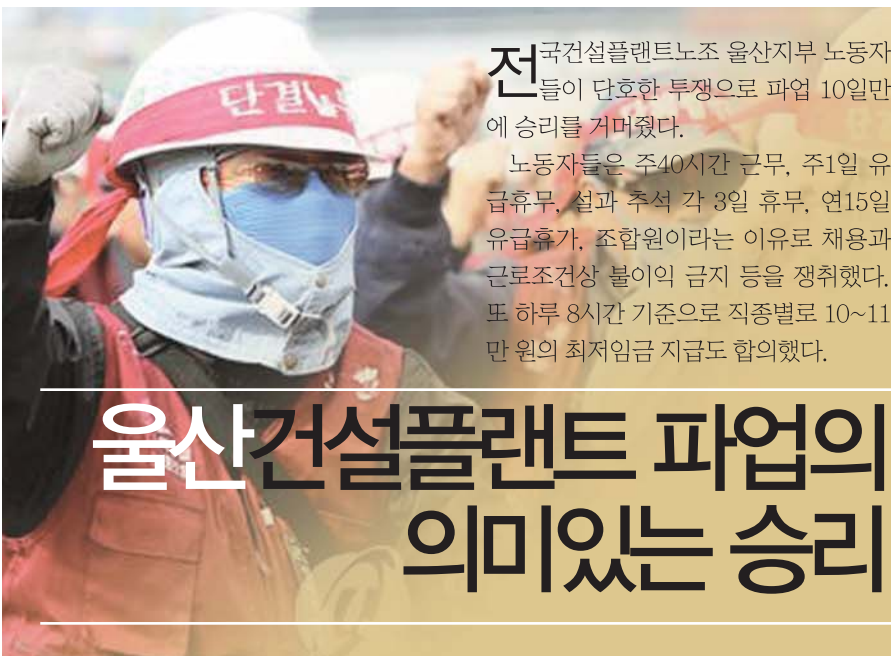
한규한

삼성범죄공화국 해체를 위한 11월 16일 삼성본관 앞 긴급집회

일시 : 11월 16일(금) 오후 2시
장소 : 삼성본관 앞(서울 태평로, 시청역 8번 출구)
주최 : 민주노총

고려대 출교 철회 투쟁 기금 마련을 위한 후원 주점

일시 : 11월 16일(금) 오후 7시 30분
장소 : 고려대 학생회관 학생식당
주최 : 출교반대대책위
후원계좌 : 하나은행 391-910195-67307(예금주 강영만)



울산건설플랜트 파업의 의미있는 승리

전국건설플랜트노조 울산지부 노동자들이 단호한 투쟁으로 파업 10일만에 승리를 거머쥔다.

노동자들은 주40시간 근무, 주1일 유급휴무, 설과 추석 각 3일 휴무, 연15일 유급휴가, 조합원이라는 이유로 채용과 근로조건상 불이익 금지 등을 쟁취했다. 또 하루 8시간 기준으로 직종별로 10~11만 원의 최저임금 지급도 합의했다.

“무엇보다 하루 8시간 일하고 법정 휴일에는 쉬게 해달라”는 요구가 관철됐다. 건설 노동자들의 인간다운 삶을 위해 또 한걸음 전진한 것이다.

이런 성과는 1천5백여 명 조합원들의 강력한 파업 동참 덕분에 가능했다. 노동자들은 매일 새벽부터 울산 SK공장의 각 출입문 앞에서 대체인력 투입을 막아섰다. 이종화 지부장은 “파업이 힘있게 진행되면서 현장 작업이 완전히 멈췄고 SK가 난리났다”고 했다.

이런 투쟁은 이랜드노조 울산분회, 삼성SDI, 효성재활원 등 울산 지역 장기투쟁 노동자들도 고무했다. 울산지부의 투쟁이 전국건설노조의 정해진 열사 투쟁과 연결돼 건설 노동자들의 투쟁 물결 확

산으로 이어질 가능성도 있었다.

파업 과정에서 해고된 조합원들의 분명한 복직을 약속 받지 않고 파업을 끝내는 점은 아쉽다. 이 때문에 일부 조합원들은 강도 높은 파업 지속을 주장했다.

따라서 현장에 복귀해서도 저들의 보복과 뒤통수치기에 맞선 현장 투쟁을 지속해야 한다. 이종화 지부장은 “노동부나 경찰은 이번 투쟁 이후에 플랜트노조의 조직력이 급속히 확대 재생산되는 것은 아닌지 염려하고 있다”고 했다.

울산지부 노동자들이 이번 승리를 바탕으로 ‘조직력을 급속히 확대 재생산’하면서 건설 노동자들의 인간다운 삶과 전체 노동운동의 전진에 기여하길 바란다.

전지윤